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전망과 그 함의: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신상협*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III. 브렉시트 협상의 가능한 결과
II.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 경과	IV.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V. 결론: 한국의 대응

| 논문요약 |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현재까지도 브렉시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치권의 분열된 생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된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브렉시트와 동시에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브렉시트 온건파는 상품(농축산물 포함)에 한정하여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와 노동 분야가 유럽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다양한 미래 통상관계 형식 중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가 되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때 한국 경제, 특히 금융시장, 통상 및 투자부문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부과로 인한 대영국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한국 국외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특히 단기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준비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통상협력학과 교수

해야 한다.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 주제어: 영국, 유럽연합, 브렉시트협정, 노딜 브렉시트, 한-영 통상관계

I. 들어가는 말

2019년 8월 현재 영국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영국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무역 물품에 대해서 현재는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 포함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관세동맹(customs union)’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 간 교역품에 대해서는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영국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 국민들이 서로의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²⁾

그러나 유럽연합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예상과는 달리 국민투표를 통해³⁾ 2019년 3월 29일에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하는 것을 결정했다. 또한 영국이 2017년 3월 29일에 리스본조약 제50조에 근거하여⁴⁾ 유럽연합

-
- 1) 경제통합은 5개 단계로 설명된다. 1단계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가 관세동맹(Customs Union), 3단계가 공동시장(Common Market), 4단계가 완전한 경제통합(Full Economic Integration),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완전한 정치, 경제통합(Full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이다. 관세동맹을 맺은 회원국들 간에는 무역 물품에 대해서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제3국과의 동종, 또는 유사 무역 물품에 대해서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
 - 2) 왕래할 때 비자가 필요 없고 간단한 출입국 심사만 거치면 된다.
 - 3) 전체 투표율은 71.8%, 이 중 51.9%가 탈퇴를 찬성, 48.1%가 탈퇴를 반대하였다. 지역별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탈퇴를 찬성하였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탈퇴에 반대하였다.
 - 4) 리스본조약 제50조 제2항에 의거 유럽연합과의 공식협상 시작. 동 조약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탈퇴통보 2년 경과시점인 2019년 3월 29일에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자동 탈퇴가 가능하다. 단 27개 유럽연합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을 경우 협상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리스본조약 50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에 정식으로 탈퇴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공식적인 2년간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가 시작되었다.⁵⁾ 2016년 7월에는 테레사 메이 총리의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9년 8월 현재까지도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향후 관계에 대한 협상 진행 상황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상이 결말지어질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2년여 간의 공식적인 유럽연합 탈퇴 과정의 논의 결과, 즉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미래관계, 특히 무역관계가 어떤 형태를 유지할 것인가가 한국과 같은 비유럽 국가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심층 분석도 하고자 한다.

II.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 경과

1. 제1단계 협상

2017년 3월 29일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브렉시트 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협상진행 과정을 세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유럽연합은 2017년 4월 29일에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을 1단계와 2단계

-
- that any EU member states may decide to quit the EU.
 - that it must notify the European Council and negotiate its withdrawal with the EU.
 - that there are two years to reach an agreement-unless everyone agrees to extend it.
 - that the exiting state cannot take part in the EU internal discussions about the departure.
- 5) 유럽연합 회원국이 탈퇴하기 위해서는 2009년 발효된 리스본조약(Lisbon Treaty) 50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리스본조약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신청 이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최순영 2016).

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전혜원 2017). 1단계 협상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2단계 협상에서는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의 미래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단계 협상에서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 간 논의에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단계 협상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에 영국은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브렉시트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영국, 유럽연합 양측의 미래관계를 동시에 논의하기를 원했다. 이렇듯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때 협상에 참여하는 유럽연합과 영국 양측의 입장은 많이 달랐다.

그러나 2017년 6월에 개최된 양측 간 실제 1단계 첫 번째 협상에서는 유럽연합이 생각했듯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만을 논의하였다. 1단계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은 다음의 3가지였다. 첫째, 영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재정적 의무 정산이었고, 둘째, 탈퇴일 기준으로 상대국에 거주 중인 시민의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세 번째 쟁점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문제였다.

1단계 협상에서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유럽연합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희원 2018).⁶⁾ 재정적 의무 정산문제에 있어서, 영국이 정산해야 할 부채 규모를 약 1,000억 유로⁷⁾로 유럽연합과 영국이 합의하였다. 협상 전 영국은 300-400억 유로 정도의 부채를 주장했었다. 또한 영국은 2019년과 2020년 유럽연합 예산도 예정대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상대국에 거주 중인 자국민들의 법적 지위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역내 거주 자국민들은 탈퇴 이전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영국 내 유럽연합 시민들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재판 관할을 상당부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과도기간 중에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 이전처럼 유럽사법재판소가 영국 내 유럽연합 시민들에 대한 사법관할권을 갖게

6) 브렉시트 제1단계 협상에서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7) 영국이 사정에 약정했던 756억 유로(유럽연합 농업보조금 및 투자 프로젝트 비용 포함), 장기부채액 108억 유로(유럽연합 직원들의 퇴직연금액 포함), 우발채무액 115억 유로로 구성되어 있다(박희원 2018).

되며, 과도기간 이후에는 영국법원이 8년 동안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고려하여 판결하는 것에 양측이 합의하였다.

이 3가지 쟁점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브렉시트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은 것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이다.

<표 1>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경과

일시		주요 내용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 → 유럽연합 탈퇴 결정
	7월 13일	메이 정권 탄생
2017년	3월 29일	EU법 제50조 발동 →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 탈퇴 결정
	4월 29일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협상을 2단계로 진행하기로 결정
	6월과 7월	영국 의회 해산, 총선거로 보수당 참패, 북아일랜드 영국잔류파인 민주연합당(DUP)와 협정, 브렉시트 절차 개시
	12월 8일	윙커위원장-메이총리, 브렉시트 전반부 협상타결, 유럽연합 탈퇴조건 대략적 합의 → 아일랜드 국경문제는 추후 회담의제로 넘김
	12월 15일	유럽연합 정상회의, 브렉시트 후반부 협상 진입 가이드라인 채택
2018년	2월 28일	유럽연합,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협정 초안 발표: 전환기 조건,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등
	3월 2일	메이 총리 런던 연설: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 불가 표명
	3월 7일	유럽연합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선택적 FTA 불가 표명
	3월 19일	21개월 전환 기간(2019. 3. 30 - 2020. 12. 31) 합의
	3월 22일	유럽연합 정상회의: 미래관계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6월 26일	유럽연합 탈퇴법 입안 → 2019년 1월 1일까지 유럽연합과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 의무화
	7월 6일	메이 총리, 내각회의 통해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 확정 후 '체커스 계획' 발표
	7월 12일	영국 정부 '브렉시트 백서' 발표
	9월 19-20일	유럽연합, 잘츠부르크서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 '체커스 계획' 퇴짜
	10월 17-18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 합의 실패
	11월 14일	유럽연합 탈퇴 협정 초안 실무적 수준에서 합의
	11월 15일	영국 내각, 유럽연합 탈퇴 협정 초안지지 발표
	11월 22일	영국-유럽연합,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11월 25일	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 '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
	12월 10일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비준 예정되었으나 메이 총리가 탈퇴협정문 표결(12월 11일 예정)을 2019년 1월 15일로 연기
12월 12일	메이 총리, 보수당 당 대표 신임투표에서 승리. 불신임 위기 넘김	
2019년	1월 15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찬성 202표, 반대 432표)
	1월 16일	영국 노동당 제출 정부 불신임안 의회에서 부결

일시		주요 내용
	1월 21일	메이 총리, 브렉시트 '플랜 B'가 포함된 결의안 제출
	1월 29일	영국 하원,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 7건 중 2건 가결, 메이 '유럽연합과 재협상' 선언
	2월 12일	메이 총리, 브렉시트 제2 승인투표 연기
	3월 11일	메이 총리, 옹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브렉시트 합의안 보완책 합의
	3월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제2 승인투표서 또 부결
	3월 20일	메이 총리,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6월 30일까지 연기 요청
	3월 21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4월 12일까지 연기 결정. 유럽연합 탈퇴 협정 승인하면 5월 22일로 연기
	3월 27일	영국 하원, 첫 번째 '의향투표'서 과반 확보 브렉시트 대안 도출 실패
	3월 2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예정 이행 기간 시작, 영국 하원, 유럽연합 탈퇴 협정 다시 부결
	4월 1일	영국 하원, 두 번째 '의향투표'서도 과반 확보 브렉시트 대안 도출 실패
	4월 5일	메이총리,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6월 30일까지 추가 연기 요청
	4월 10-11일	유럽연합, 특별정상회의 열고 브렉시트 2019년 10월 말까지 연기 결정
	5월 말	유럽의회 선거
2020년	5월	영국 총선거(예정)
2021년	1월 1일	유럽연합, 2021-27년 다년간 예산(재정 계획) 적용 개시
	12월 31일	이행 기간 종료(종료 6개월 전에 유럽연합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 『연합뉴스』(2019/04/11)⁸⁾

북아일랜드의 민주통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DUP)의 반대로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과 아일랜드 국경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지 추상적인 원칙적 합의만 이룰 수 있었다.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①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의 일부인 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 국경에 물리적 국경방지, ②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 통행에 대한 제한 방지 등에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2단계 협상으로 연기되었다.⁹⁾

영국이 현재까지도 유럽연합과의 관세동맹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지만 브렉시트 강경논자인 보리스 존슨이 영국 총리에 선출됨

8) 그 외에 다음의 사이트도 참고하여 저자가 보충 작성함. 신용대 (2018),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는 EU: 영국, EU탈퇴협정안이 몰고 온 정치적 위협”,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95. (2019년 5월 25일 검색)

9) 이 문제는 2018년 10월까지도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과 유럽연합 간에 이견을 보인 사항이었다.

으로써 유럽연합과 관세동맹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만약 실제로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관세동맹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한다면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물리적 국경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 도입될 것이다. 이는 곧 영국과 아일랜드 국경이 존재할 것임을 뜻한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영국과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합의는 영국과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제2단계 협상 내용인 영국과 유럽연합 간 미래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 가지, 영국이 그간 선호한 영국과 유럽연합 간 미래관계, 즉 영국이 유럽 관세동맹을 탈퇴한다면 제1단계에서 합의된 내용과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다. 1차 협상에서 유럽연합과 영국 간 합의된 사항은 최종 ‘탈퇴 협정’에 포함될 내용의 원칙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제1단계 협상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제2단계 협상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된다.

2. 제2단계 협상

2단계 브렉시트 협상은 2018년 2월에 시작되었다. 2017년 12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전환조치에 관한 협상 지침을 2018년 1월에 채택하고 3월에 유럽연합과 영국의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영국과 유럽연합 간 2단계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될 수 있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1단계 브렉시트 협상을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하였다. 그러나 2단계 브렉시트 협상은 1단계 협상보다는 좀 더 어렵다. 1단계 협상 과정에서 표출된 많은 사항에 대한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이견과 영국 내부의 통일되지 않은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 등¹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2017년 12월 15일 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은 영국이 양측의 미래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2018년 9월 11일에는 브렉시트의 수위에 대해서 유럽연합과의 완전한 절연을 주장하는 영국 집권 보수당 내 강경파의원 50여 명이 메이 총리를 낙마시키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메이 총리는 9월 17일 BBC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협상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답하였다. ‘노딜 브렉시트’란 무역, 국경 왕래, 상대국 장기 체류 시 신분 등에 대해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

2단계 협상은 ‘탈퇴 협정’에 관한 협상과 유럽연합과 영국의 미래 통상관계에 대한 협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탈퇴 협정’에 관한 협상은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1단계 유럽연합과 영국, 양측 간에 합의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논의를 했다. 둘째, 기존의 영국과 유럽연합 간 관계 청산을 위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사항 중 합의를 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셋째, 2017년 12월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2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약 2년간의 ‘전환 기간¹¹⁾’에 관한 논의였다(『조선일보』 2017/08/31). 또한 이 단계에서 유럽연합과 영국의 향후 통상관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2단계 협상은 1단계 협상보다 쟁점사항이 많고, 주요 쟁점인 양측 간 통상관계협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협상 타결 이후 각자 의회 비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 늦어도 2018년 11월까지의 최종 합의를 이뤄야 했지만 2019년 7월 현재까지도 최종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3. 브렉시트 협상의 교착상태 이유: 영국 정부 내부의 통일된 입장의 부재

2016년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된 이후 협상이 현재까지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2016년 직후인 7월에 메이 총리 정부가 출범하였고, 이는 브렉시트 협상의 효과적 진행의 시작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19년 8월 현재까지도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영국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된다.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이민정책 등에서 유럽연합에 이양한 영국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

소속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유럽연합 탈퇴를 반복하자며 국민투표를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다(『조선일보』 2018/09/20).

11) 이 전환 기간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이 새롭게 양측 간의 관계를 시작하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고 있다. 또한 브렉시트와 동시에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의 통상관계를 ‘유럽연합-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형식’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EU-영국 FTA 체결 시 EU와 영국의 통상관계



· 정민정(2019 재인용)

반면 메이 총리를 포함한 브렉시트 온건파들은 상품(농축산물 포함)에 한 정하여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와 노동 분야에 대해 유럽연합과 별개의 독자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이 선호하고 있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 통상관계, 즉 상품 분야에 한하여 유럽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식은 ‘스위스 모델’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상품 분야에 한해 유럽연합 단일시장 잔류 시 EU와 영국의 통상관계



· 정민정(2019 재인용)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메이 정부 출범이 후 시간이 감에 따라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이 ‘하드 브렉시트’에서 점차 ‘소프트 브렉시트’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이다. 2018년 2월 메이 총리는 런던에서 행한 연설에서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은 불가함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을 확정된 후에 브렉시트 온건파들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체커스계획(Chequers Plan)’을 밝혔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18년 7월 12일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략을 담은 ‘브렉시트 백서’를 발표했다(<표 2> 참조). ‘브렉시트 백서’의 내용은 ‘체커스 계획(Chequers Plan)’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 마디로 ‘브렉시트 백서’의 내용은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에도 유럽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브렉시트 백서’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연합과 상품 및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기존처럼 유지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영국을 여행하고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뉴시스』 2018/07/13). 그러나 이 백서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영국의 독자적 색깔을 강화해 유럽연합과의 긴밀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외의 기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는 전략도 이 백서에 포함되어 있다.¹²⁾

2018년 7월 12일 ‘브렉시트 백서’ 발표 이후에도 탈퇴방식과 탈퇴 후 유럽연합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불명확하다.

영국 하원은 2019년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메이 영국 총리는 1월 21일 탈퇴 협정 승인 부결에 대한 대응책, 소위 ‘플랜 B’¹³⁾가 포함된 브렉시트 수정안을 영국 하원에 다시 제시하고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2019년 1월 29일 표결에서도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수정안과 탈퇴 협정에서 아일랜드 국경문제 안전장치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은 통과되었다.¹⁴⁾ 그러나 협상 기간 연장 추진을 요구하는 수정안 2건은 부결되었다.¹⁵⁾

12) 온건파들의 이런 생각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로, 우선 브렉시트 강경파는 온건파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제3국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영국의 이런 노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더 중요한 이유로 유럽연합이 영국이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13) 1월 15일 영국 하원에서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14)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수정안은 찬성 318표, 반대 310표로 통과되었다. 탈퇴 협정에서 아일랜드 국경문제 안전장치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은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통과되었다.

15) 각각 찬성 298표/반대 321표, 찬성 291표/반대 322표로 부결되었다.

<표 2> 브렉시트 협정안의 주요 내용¹⁶⁾

분야별	협정안 주요 합의 사항
이행 기간	- 2019년 3월 29일 탈퇴 이후 2020년 12월 말까지 전환 기간 설정. 이행 기간 동안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잔류, 유럽연합규범 준수. 이 기간에 양측은 새로운 미래관계를 구축. 기간 연장 필요 시 2020년 7월 1일 이전 공동합의에 따라 전환 기간 1회 연장. 1회 연장 기간 언급 없음
아일랜드 국경	-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하여 영국 전체가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잔류하는 '안전장치(backstop)' 방안 합의 - 영국은 영구적인 새 무역협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잔류.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적용 - 전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미래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기로 함
동일 규제	- 안전장치 가동 기간 영국은 경쟁 및 국가보조, 고용, 환경기준, 조세 등의 분야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규제 수준 유지 - 영국이 감세 등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유럽연합 산업 및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 - 협정문에 포함된 '퇴행금지조항(non-regression clauses)'에 따라 영국은 유럽연합 수준의 사회-환경-노동 기준 유지
분담금 정산	-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유럽연합분담금 정산. 영국은 유럽연합 직원들의 언급 부담 - 유럽연합 회원국 시절 약속한 2020년까지 유럽연합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기여 - 이혼합의금은 약 39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 3천억 원)로 추산 - 전환 기간인 2019년, 2020년 유럽연합 예산 분담금 부담 - 전환 기간 연장 시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유럽연합예산 부담 전망
금융시장	-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허용 미국과 일본 기업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접근권과 유사 - 유럽연합의 '동등성 원칙(equivalence system)'에 따라 영국의 규제가 유럽연합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분야의 영업 관련 인허가, 보고절차 면제

영국 하원은 3월 27일에도 8개의 대안에 대한 '1차 의향 투표(indicative vote)¹⁷⁾를 진행하였으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다. 영국 하원에서 2019년 4월 1일 실시된 브렉시트에 대한 '2차 의향투표¹⁸⁾에서도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부결되었다.

이날 영국 하원에서 부결된 대안은 다음과 같다. ① 영구적 포괄적 관세

- 16) 신용대 (2019),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무엇이 문제인가? EU탈퇴협정 합의 이후의 혼란”,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86. (2019년 5월 25일 검색)
- 17) 의향투표란 영국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다.
- 18)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의향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동맹 잔류, ② 영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가입해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참여하는 노르웨이식 모델, ③ 의회를 통과한 어떠한 안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 확정 국민투표(confirmatory referendum)안, ④ 유럽연합이 장기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회가 브렉시트 취소 여부를 투표하는 방안이었다.

4가지 대안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나 유럽연합과의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잔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으로 나왔다(『뉴스핌』 2019/04/02). 보수당 켄 클라크 의원이 제시한 이 안은 찬성 273표, 반대 276표로 3표차로 부결됐다. 이어 확정 국민투표안이 찬성 280표, 반대 292표로 12표차로 부결돼 두 번째 유력 대안으로 결론이 났다.

유력대안으로 거론된 관세동맹과 확정 국민투표 2개의 안의 표차가 지난 27일보다(각각 8표차, 27표차) 좁혀진 만큼 3차 의향투표에서는 과반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3차 의향투표에서 이 두 개의 안 중에서 어떤 안이라도 의회의 과반을 확보하면 이 안들에 대해서 메이 총리가 부인해 왔지만 메이 총리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 하원은 3차 의향투표를 4월 3일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영국 하원은 추가 의향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의사 일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이 표결결과는 찬성, 반대 310표 동수였고,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던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반대표를 선택함으로써 3차 의향투표는 실시되지 않았다. 버커우 하원의장은 ‘중요 결정’은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영국 하원 전례에 따라서 이 표결에서 반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¹⁹⁾

이렇듯 영국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질서 있게 탈퇴하기 위해 꼭 필요한 탈퇴협정의 발효 가능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곧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말한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기 총선,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 협상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이 대두하고 있으나 그 어느 안도 영국 하원 내 과반의 지지를 획득하여 통과될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종합적으로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유럽단일시장

19) 판도라티비, “영국 하원, ‘제3 의향투표 개최’ 의사일정안 부결”, <http://www.pandora.tv/view/yunhap/57657744>. (2019년 8월 3일 검색)

에 대한 최대한의 시장 접근성 보장을 우선순위의 목표로 두고 있다. 유럽 연합 운영체제에 대한 일반적 통념에서 볼 때, 영국 정부의 입장을 상반되는 두 가지 목표, 즉 시장접근성과 규제주권 유지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이 근본 이유여서 영국 정치가들이 브렉시트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강유덕 2018).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현재 입장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은 영국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3개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거부하였다. 단 유럽연합은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통과시킬 경우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기해 주기로 하였다. 만일 영국 하원이 탈퇴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4월 12일까지만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과 유럽의회(5월 23-26일) 선거에 참여해서 브렉시트의 장기 연기를 할 것인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영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후 유럽연합은 2019년 4월 10일, 11일 양일간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를 2019년 10월 말까지 연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렇듯 유럽연합으로의 탈퇴를 결정한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상은 영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서 유럽연합과 영국 양측은 아직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방식과 탈퇴 후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설정에 관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전혜원 2019).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영국의 집권당인 보수당 그리고 제1야당인 노동당에 모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영국 국민들이 2019년 2월에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서 표출했다. 2019년 5월 2일 실시된 영국 지방의회 선거에서 집권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이 참패하였다. 248개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8410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보수당은 3564석만을 얻었다. 보수당은 이번 선거 전에 4894석을 갖고 있었는데 3564석은 1330석이 줄어든 의석수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도 기존의 2015석에서 84석 줄어든 2021석만을 획득했다. 반면에 브렉시트 자체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주장해 왔던 자유민주당과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들이 많은 의석을 얻었다. 자유민주당의 경우 이번 지방의회선거에서 기존의 647석에서 1351석으로, 녹색당의 경우 기존의 71석에서 265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이번 지방의회선거의 결과는 영국 정치권, 특히 집권보수당과 제1야당인 노동당이 브렉시트 협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고, 또한 적지 않은 수의 영국인들이 유럽연합 잔류를 원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조선일보』 2019/05/06).

Ⅲ. 브렉시트 협상의 가능한 결과

1. 브렉시트 협정 발효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정에 대한 현재 입장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최종 목표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보면,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 양측이 협상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양측 간의 미래 통상관계는 다양하다.

브렉시트 추가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Irish Backdrop)로서 잠정적으로 영국 전체가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한시적 EU 관세동맹 잔류 시 EU와 영국의 통상관계



· 정민정(2019 재인용)

영국이 유럽연합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이론상의 미래 통상관계는 <표 3>이 설명하고 있듯이 3가지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영국이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유럽경제지

역은 1991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스위스를 제외한 EFTA 회원국들이 유럽경제지역 회원국들이고 이들 국가 간에는 동등한 경제 조건 및 규범하에 상호 간의 교역을 하고 있다. 이렇듯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은 유럽연합 수준 경제통합의 장점을 누리는 반면, 외교, 안보 및 비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무역협상 등에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관계 유형을 ‘노르웨이 모델’이라고 한다. 단 영국이 노르웨이처럼 유럽경제지역에 가입하는 경우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이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유럽연합 규제 설정에는 참가할 수 없다.

<표 3> 영국의 유럽연합 대안 및 장단점 비교

영국의 대안	장점	단점
노르웨이 모델(EEA)	- 유럽연합 수준 단일시장 접근성 - 가입 용이성	- 낮은 자주성 - 높은 분담금 - 이주민 수용 의무
스위스 모델 (양자 협정)	- 유럽연합 수준 단일시장 접근성 (서비스 산업 미포함)	- 낮은 자주성 - 양자협정 복잡성 - 이주민 수용 의무
캐나다 모델(CETA)	- 높은 자주성 - 이주민 미수용	- FTA 체결 복잡성 - 서비스 산업 미포함
기본 모델(WTO)	- 높은 자주성 - 이주민 미수용	- 가장 높은 관세 수준 - 서비스 산업 미포함

▪ 최순영(2016)

유럽연합은 영국이 유럽경제권(EEA)에 머무르고 관세동맹 또는 기초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이 유형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이미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영국의 메이(Theresa May)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의 유럽연합-영국 관계 형성에 있어 유럽경제지역(EEA)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에 입각한 관계구축을 선언한 바 있다.”²⁰⁾ 테레사 메이 영국 전 총리는 재화에 대

20) Theresa May, “The government’s negotiating objectives for exiting the EU: PM speech,” <https://www.government/speeches/the-governments-negotiating-objectives-for-existing-eu-pm-speech>. (2018년 7월 7일 검색)

한 “공동의 규칙”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영국과 유럽연합 간 명백한 국경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4월 1일 실행된 ‘2차 의향투표’에서도 이 안이 부결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영국의 미래 통상관계가 이런 유형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영국과 유럽연합 간에 양자협정²¹⁾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허용하지만 서비스는 접근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스위스가 이 경우이다. 스위스는 EFTA국가이면서 EEA에 미가입된 국가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과 무역, 통상 등의 분야에 대한 다수의 양자협정 체결을 통해 상품에 있어서는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했으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 유형의 미래 통상관계를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국의 브렉시트 온건파들이 선호하고 있다.

영국이 스위스와 같은 양자협정 방식을 선택할 경우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이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분담금을 지불해야 되지만 유럽연합 규제 설정에는 참가할 수 없다. 결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21)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양자 간 무역협정이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의 향후 무역관계는 다음의 3가지 유형 중 1가지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이 체결하고 있는 3가지 양자 간 무역협정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관세동맹(Customs Unions)이다. 이 유형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관세 철폐, 역외 국에 대한 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s)를 시행한다. 두 번째 유형은 ‘Association Agreements, Stabilization Agreements, Free Trade Agreement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이다. 이 유형의 협정을 체결하면 관세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마지막 3번째 유형은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s’로 양자 간 경제 관계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한다.”(안상욱 2019, 1)

<유럽연합의 양자 간 무역협정(2018년 이후)>

국가	무역협정	서명 일자
일본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18년 7월 18일 서명
베트남	Free Trade Agreement	2018년 10월 19일 서명
싱가포르	Free Trade Agreement	2018년 10월 19일 서명

▪ 안상욱(2019);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 (2019년 8월 11일 검색)

주요 쟁점이 이주민 수용 반대 및 영국의 자주성 확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유럽경제지역 가입 또는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다소 무의미하며,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표 3> 참조).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 이주민을 수용하지 않고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다.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국경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이런 유형으로 설정한다면,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택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유럽연합과의 무역 관계를 자유무역협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영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갖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은 서비스 분야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협상이 7년이 지난 2016년 현재에도 최종적인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리스본 조약에 명시된 유럽연합 탈퇴 기간인 2년 안에 영국이 유럽연합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완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선호하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통상관계 유형이다.

영국이 앞에서 설명한 3가지 방식 중 하나도 택하지 않아서 영국과 유럽연합이 미래통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된다면,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향후 통상관계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앞선 3개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가 상품에 적용될 것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경우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유럽 단일시장 접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영국이 갖고 있는 경쟁우위를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유럽연합과 영국 양측 간의 통상 문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를 고려해 봤을 때 세계 경제는 여전히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노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과 합의하지 못하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거나, 유럽연합이 만장일치로 탈퇴시킨 연장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도 발생한다. 존슨이 영국 총리가 됨으로써 앞에서 논의했던 다양한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 통상관계 형식 중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가 되었다. 브렉시트 강경파의 주장적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최근에 보수당의 당수에 선출됨으로써 영국의 신임 총리가 되었다. 보리스 존슨은 보수당 대표 경선 유세에서도 “10월 31일 유럽연합을 떠나기 위해 노딜도 불사하겠다”며 “죽기 아니면 살기”의 마음으로 밀어붙이겠다고 그의 생각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유럽연합도 이미 여러 차례 밝혀 왔듯이 존슨이 영국에 유리한 조건만을 요구할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양측이 브렉시트에 대한 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즉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노딜 브렉시트는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영국의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향후 무역 관계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무역기구의 경우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유럽단일시장 접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를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영국 재무부는 어떠한 형식의 브렉시트를 채택하든 그 이후 영국의 경제적 상황은 유럽연합에 잔류했을 경우보다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Guardian* 2018/11/28). 특히 영국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영국은행은 영국의 GDP는 향후 15년간 8% 감소할 것이고 실업률도 7.5% 증가, 인플레이션도 6.5%까지 증가하며 집값은 최대 30%까지 하락하고, 파운드화가 25%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Guardian* 2018/11/28; 『조선일보』 2019/07/24). 이런 상황은 세계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3.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철회

영국이 유럽연합으로 유럽연합 탈퇴 의사를 철회하는 통고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영국과 유럽연합의 통상관계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서 결정하기 이전의 관계로 회복됨을 의미한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우선 영국 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제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도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포함하여 브렉시트에 반대했던 영국 노동당 의원 중 상당수가 유럽연합에 잔류를 결정하는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²²⁾ 또한 영국 기업경영인 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기업의 57%는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 재실시를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Guardian* 2018/11/08). 유럽사법재판소도 영국이 유럽이사회의 만장일치가 없이도 유럽연합 탈퇴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²³⁾

그러나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 모두 영국의 브렉시트 철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제2차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항들은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합의를 해도 최소한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2차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에 계속해서 잔류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IV.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2단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유럽연합과 영국의 향후 통상관계가 변화될 것이다. 즉 영국은 유럽연합회원국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고 따라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던 이들 국가는

22) 한국무역협회, “영 노동당 일각, EU 잔류 포함 Brexit 재투표 주장”, <https://www.kita.net>. (2018년 12월 19일 검색)

23) InfoCuria, “Wightman and Others v 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Judgment in Case C-621/18,”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num+C-621%252F18>. (2019년 7월 27일 검색)

영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위한 협상을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신청하는 시점부터 우선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미래 통상관계를 결정짓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이어서 영국은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비회원국가들과 맺은 경제-무역-통상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이들 유럽연합 비회원국가들과 협상을 시작했다.²⁴⁾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2년간의 전환 기간을 두는 것에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이 생각을 같이한다 해도 영국이 이들 국가 모두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이다.²⁵⁾ 향후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연합 비회원국가들이 받을 영향은 브렉시트 탈퇴 세부조건과 관계 정립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구체화 될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 양측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따라서 한국과 영국의 통상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16년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한국은 영국의 이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받을 영향, 특히 무역에서 받을 영향에 대해 준비해 왔다.

브렉시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과 영국의 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이후 한국과 영국²⁶⁾과의 통상관계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지난 2011년 7월 1일 체결, 발효시켰기 때문이다.

영국은 한국의 대유럽연합 수출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대유럽연합 수입에서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영국은 한국 기업체들이 유럽연합에 진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해 왔고, 풍부한 양질의 인력, 높은 기술력,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정치적 안전성, 지리적 편의성, 낮은 제조업 인건비,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 영어권과 같은 다양한 기업입지로의 장점을 갖고 있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다.²⁷⁾

24)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영국은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도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무역신문』 2018/07/19).

25)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전환 기간이 없을 수도 있다.

26)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상대국이다. 2018년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4조 5천억 원이었다.

한국과 영국의 연도별 교역 현황, 특히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발효된 2011년 이후의 연도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표 4/그림 4>와 같다. 2011년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영국에 대한 수출은 약간의 증가와 감소의 추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직후인 2012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7년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에 한국과 영국의 무역량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5년부터 세계 경제가 더욱더 심화된 불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계적 불황이 2012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는 본격적인 불황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무역은 1983-2008년 연평균 증가율이 6%였는데²⁸⁾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 동안에는 3%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7년 한국과 영국의 교역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대영국 수출 1위 품목은 해양구조물이다.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 선박,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이 대영국 수출품목 2위, 3위,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위권 밖에 있던 축전지, 무선전화기, 타이어 품목이 2018년도에는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였다. 2017년 영국으로부터의 수입 1위 품목은 원유이며, 승용차, 의약품, 원동기, 주류는 2018년에도 호조세를 보였다. 그림, 계측기, 농약 등도 2016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10대 수입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2018년에도 한국의 대영국 무역 규모는 수출액 63.6억 달러, 수입액 68.1억 달러로²⁹⁾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들 중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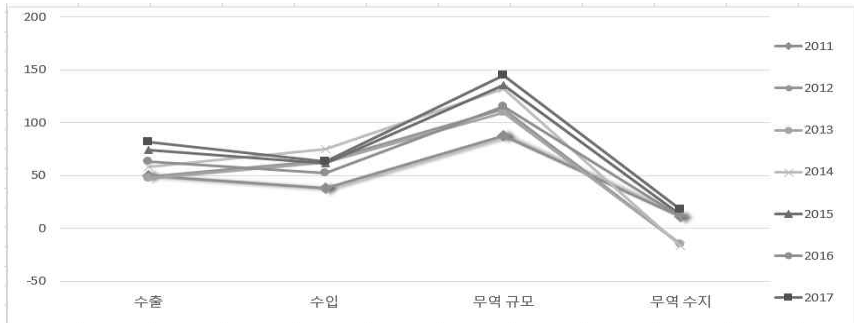
27) 신용대 (2019),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Brexit가 영국에 주는 변화와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6&page=14. (2019년 5월 25일 검색)

28) 2009년 세계 무역의 연평균성장률은 -10.6%이었지만, 2010년은 13%, 2011년은 6.8%이었다. 특히 2015년 상품 무역액은 13.8%나 감소(달러화 기준)하여 2009년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민중의소리』 2016/04/21).

29) 2018년 총무역액 1조 1403.4억 달러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대영국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1.1%, 수입액은 총수입액의 1.3%였다.

<표 4/그림 4> 한국-영국 연도별 교역 현황(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³⁰⁾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금액	49.7	49.0	47.3	57.8	73.9	62.9	81.2
	증가율	-10.5	-1.5	-3.5	22.3	27.8	-14.9	29.2
수입	금액	38.2	63.7	61.9	74.5	61.3	52.1	63.2
	증가율	16.9	66.8	-2.7	20.2	-17.7	-14.9	21.2
무역 규모		87.9	112.7	109.2	132.3	135.2	115.0	144.4
무역 수지		11.5	-14.7	-14.6	-16.7	12.6	10.8	18.0



세계 경제는 현재 불황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³¹⁾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영국 은행은 잘 분석하고 있다(손수석 2019, 74). 영국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질서 브렉시트’와 ‘분열 브렉시트’로 모델링해서 분석하고 있다. ‘무질서(Disorderly)’ 브렉시트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전환 기간도 없으며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제3국 간 무역규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말한다. 또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전환 기간도 없지만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제3국 간 무역규정이 영국에 적용되는 시나리오를 ‘분열(Disruptive) 브렉시트’로 규정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영국은행에 따르면 무질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향후 15년간 영국은 국내총생산이 최대 8% 감소할 수 있고 실업률도 최대 7.5%에 이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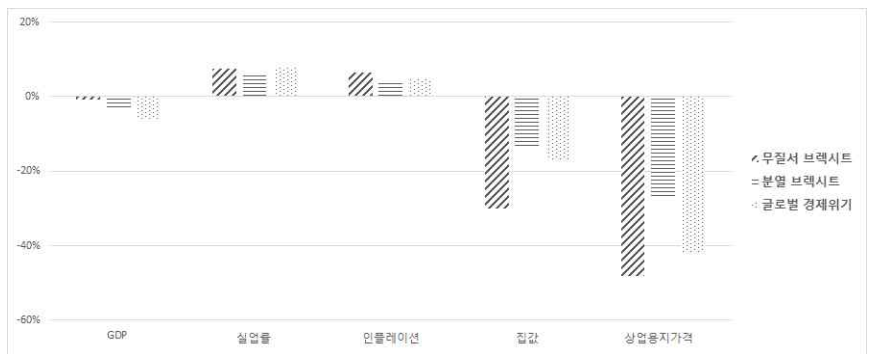
30)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2019년 5월 25일 검색)

31) 신용대 (2019),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Brexit가 영국에 주는 변화와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6&page=14. (2019년 5월 25일 검색)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최대 6.5%까지 오르며 집값은 최대 30%까지 하락하고, 파운드화가 25% 급락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표 5/그림 5> 참조).

<표 5/그림 5>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시나리오별 세부 영향³²⁾

구분	GDP (최대하락률)	실업률 (최대치)	인플레이션 (최대치)	집값 (최대하락률)	상업용지가격 (최대하락률)
무질서 브렉시트	-8.0%	7.5%	6.5%	-30%	-48%
분열 브렉시트	-3.0%	5.75%	4.25%	-14%	-27%
글로벌 경제위기 (2008)	-6.25%	8.0%	4.75%	-17%	-42%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2019년 10월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향후 유럽 연합과의 관계 형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영국이 유럽연합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³³⁾

32) Bank of England(2018)의 자료 “EU withdrawal scenarios and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를 다음의 사이트에서 재인용하였음. 신용대 (2019),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Brexit가 영국에 주는 변화와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6&page=14. (2019년 5월 25일 검색)

브렉시트로 더욱더 심화될 영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 한-영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경제는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표 6/그림 6> 참조). 영국 경제는 2012년 이후 유로존이나 유럽연합 회원국들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6년 6월 브렉시트 결정 이후 경제성장률이 유로존이나 유럽연합 회원국들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경기 둔화의 주된 요인들은 그동안 영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와 투자 감소이다. 특히 영국의 민간소비 증가율의 둔화는 한국제품에 대한 영국민들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국 기업들의 영국에 대한 수출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더 어려워질 영국 경제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한국과 영국 간 무역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영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할 수 부정적 상황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손수석 2019; 광동철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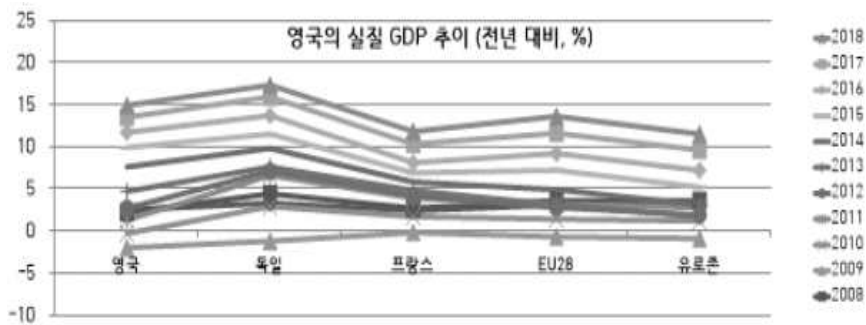
우선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한국과 영국 간 무역은 유럽연합 공동관세율(특혜 관세율)³⁴⁾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의 독자적 최혜국(MFN) 실행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상품 수출입 시 통관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33) 부정적인 영향 정도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어서 WTO 규칙에 따라서 유럽연합과 교역하는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FTA를 통해서 교역하는 경우, EEA에 참여하여 교역하는 순으로 부정적인 영향 정도가 적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정부(HM Government, 2018)가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전제로 한 최초의 정부안인 Chequers Plan, FTA안, EEA안, WTO안 등 4개의 시나리오별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15년간에 걸쳐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역내 이민 순 유입이 중단된다는 가정하에 노딜 브렉시트(WTO안)의 경우 -9.3%, FTA안의 경우 -6.7%, 최초의 정부안 Chequers Plan의 경우 -2.5%로 나타났다. 신용대 (2019),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Brexit가 영국에 주는 변화와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6&page=14. (2019년 5월 25일 검색)

34) 한국산 상품 중 99.6%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표 6/그림 6> 영국의 실질 GDP 추이(전년 대비, %)³⁵⁾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영국	2.5	-0.3	-4.2	1.7	1.6	1.4	2.0	2.9	2.3	1.8	1.8	1.4
독일	3.3	1.1	-5.6	4.1	3.7	0.5	0.5	2.2	1.7	2.2	2.2	1.4
프랑스	2.4	0.3	-2.9	1.9	2.2	0.3	0.6	1.0	1.1	1.2	2.2	1.5
EU28	3.1	0.5	-4.3	2.1	1.8	-0.4	0.3	1.8	2.3	2.0	2.4	2.0
유로존	3.1	0.5	-4.5	2.1	1.6	-0.9	-0.2	1.4	2.1	2.0	2.4	1.9



한국과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기준도 적용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완성차의 경우 유럽연합의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외산 부품 비율이 45% 이하여야 한다.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더 이상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따라서 더 이상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에서 제작된 부품-원자재는 더 이상 유럽연합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로, 영국으로부터 획득한 인증-표준, 저작권, 상품표기, 면허³⁶⁾ 등을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무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35) Eurostat의 자료를 다음의 사이트에서 재인용하였음. 신용대 (2019),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Brexit가 영국에 주는 변화와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6&page=14. (2019년 5월 25일 검색)

36) 브렉시트 이전 영국에서 발급받은 수출입 면허는 브렉시트 이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영국에서만 수출입 면허를 획득한 경우에는 유럽연합 수출입 면허를 다시 획득하여야 한다. 수출입 면허의 예로는 폐기물, 위험화학물질, 문화 상품, 군사기술과 장비 등에 대한 면허가 있다.

지로 유럽연합의 인증-표준, 저작권, 상표표기, 면허 등도 영국과의 무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미 획득한 인증-표준, 저작권, 상표표기, 면허 등을 미리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획득할 필요가 발생한다.

세 번째로,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영국과 영국 이외의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는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³⁷⁾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전되고 있다(곽동철 2019 재인용).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역외국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은 영국과의 관계에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에 개인정보 보호를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수출 시 통관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손수석 2019). 한국이 영국과 무역을 할 경우 교역품 모두 통관 및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존 영국의 통관시스템과 인력만으로는 교역품 통관에 더 오랜 시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영국의 무역관계는 특히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V. 결론: 한국의 대응

앞에서 이미 분석하였듯이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브렉시트 협상은 많은 불확실성 속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영국 내 협상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브렉시트의 형태를 예측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때 한국 경제, 특히 금융시장, 통상 및 투자부문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노력이

37)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2018년 5월 25일 발효)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노력해 왔던 것 중 하나가 영국과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부과로 인한 대영국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영국 양국은 2019년 6월 10일에 ‘노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양국은 현행 수준의 상품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10월 31일 이전에 본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³⁸⁾ 또한 한국과 영국 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되면 2년 내 이번 협정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플러스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무관세 적용을 받던 자동차가 10%, 항공기 부품이 2.7%,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최고 45%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었는데 이번 원칙적 합의에 따라 지금과 같이 무관세가 적용되게 되었다. 운송과 관련해서도 유럽연합을 거친 경우에 향후 3년간은 직접운송으로 인정해, 한국 기업들이 유럽연합 내 물류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영국 간의 원칙적인 합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향후 가장 필요한 조치는 브렉시트가 예정된 10월 31일 이전에 한-영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영국에서 증가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영국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한국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특히 단기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손수석 2019, 75). 브렉시트, 특히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 금융시장, 교역과 투자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³⁹⁾

38) 기존의 유럽연합과 한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원칙과 동일한 수준이다.
39) 실제로 영국이 2016년 7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후 한국의 금융 시장도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코스피가 3.0

한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대미국 달러 대비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원화 가치의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외국자본의 유출 가능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영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기존 영국에 대한 투자가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다른 유럽연합회원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과 같은 유럽연합 비회원국들의 경우 영국을 유럽연합 시장 진입의 교두보로 인식하여 영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해 이들 국가의 영국 진출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럽 진출 전략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⁰⁾ 한국 정부는 선제적으로 관련 규제 완화, 무역투자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⁴¹⁾

9% 하락했고, 코스닥은 장중 7%대까지 폭락했다가 4.76%로 하락 마감했다. 박영욱, “주식 농부 박영욱이 말하는 성공투자법”,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64509&memberNo=39087579&vType=VERTICAL>. (2019년 6월 7일 검색)

40) 인증-승인-면허의 문제, digital trade(big data)에 대한 좀 더 적극적 대응책, 온라인 개인정보 문제(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년 5월 25일 발효) 등을 포함한다(곽동철 2019).

41) 신용대 (2019),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Brexit가 영국에 주는 변화와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6&page=14. (2019년 5월 25일 검색)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강유덕 (2018). “브렉시트 이후 EU 금융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동등성 인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모색.” 『유럽연구』. 36권. 3호, pp. 157-196.
- 곽동철 (2019).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는 우리 기업의 유의 사항.” 『EU 시장전망 및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 자료집』. 한국유럽학회.
- 손수석 (2019). “브렉시트의 전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U 시장전망 및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 자료집』. 한국유럽학회.
- 안상욱 (2019). “2019년 EU 경제-통상환경.” 『EU 시장전망 및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 자료집』. 한국유럽학회.

2. 기타

- 박희원 (2018). “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Weekly KDB Report』. 제761호.
- 전혜원 (2017). “영국의 EU 탈퇴 협상 1단계 종료: 의미와 전망.” 『IFANS FOCUS』. 2017-26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_____ (2019). “노딜 브렉시트의 전망과 함의.” 『IFANS FOCUS』. 2019-2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정민정 (2019). “브렉시트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 EU 통상정책 방향.” 『이슈와 논점』. 제1534호. 국회입법조사처.
- 최순영 (2016). “브렉시트의 배경과 향후전망.” 『자본시장 Weekly』. 24호. 자본시장연구원.
- “노딜 강경과 포퓰리스트 의회민주주의 원조국 총리되다.” 『조선일보』. 2019년 7월 24일.
- “3년 지났지만 여전히 먼 브렉시트, 영 국민투표 후 일지.” 『연합뉴스』. 2019년 4월 11일.
- “3차 브렉시트 협상 ‘교착 상태’... 5가지 주요 요인.” 『조선일보』. 2017년 8월 31일.
- “디플레이션과 무역감소가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민중의소리』. 2016년 4월 21일.
- “영 ‘2차 의향투표’ 브렉시트 4개 대안 전부 거부, 3일 한 번 더.” 2019년 4월 2일.
- “영 보수당 지방의회 선거 참패, 의석 27% 잃었다.” 『조선일보』. 2019년 5월 6일.
- “영국, EU 탈퇴 후 TPP 참여 의향 표명.” 『한국무역신문』. 2018년 7월 19일.
- “영국, 브렉시트 백서 발간...EU와 긴밀관계 유지 방침.” 『뉴시스』. 2018년 7월 13일.
- “재투표 요구·총리 축출 논의... 영국 ‘브렉시트 내전’ 속으로.” 『조선일보』. 2018년 9월 20일.

- “Bank of England says no-deal Brexit would be worse than 2008 crisis.” *Guardian*. November 28, 2018.
- “Business leaders call for second Brexit referendum.” *Guardian*. November 8, 2018.
- “Economic forecasts strike blow to Theresa May’s Brexit deal.” *Guardian*. November 28, 2018.
- 박영욱. “주식 농부 박영욱이 말하는 성공투자법.”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64509&memberNo=39087579&vType=VERTICAL>. (2019년 6월 7일 검색)
- 신용대 (2018).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는 EU: 영국, EU탈퇴협정안이 몰고 온 정치적 위협.”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95. (2019년 5월 25일 검색)
- _____. (2019).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Brexit가 영국에 주는 변화와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6&page=14. (2019년 5월 25일 검색)
- _____. (2019).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무엇이 문제인가? EU탈퇴협정 합의 이후의 혼란.”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86. (2019년 5월 25일 검색)
- 판도라티비. “영국 하원, ‘제3 의향투표 개최’ 의사일정안 부결.” <http://www.pandora.tv/view/yunhap/57657744>. (2019년 8월 3일 검색)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2019년 5월 25일 검색)
- _____. “영 노동당 일각, EU 잔류 포함 Brexit 재투표 주장.” <https://www.kita.net>. (2018년 12월 19일 검색)
-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 (2019년 8월 11일 검색)
- InfoCuria. “Wightman and Others v 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Judgment in Case C-621/18.”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num+C-621%252F18>. (2019년 7월 27일 검색)
- Theresa, May. “The government’s negotiating objectives for exit in the EU: PM speech.” <https://www.government/speeches/the-governments-negotiating-objectives-for-existing-eu-pm-speech>. (2018년 7월 7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9년 08월 21일 |

| 논문심사일 : 2019년 08월 30일 |

| 게재확정일 : 2019년 09월 11일 |

| ABSTRACT |

**A Study on the Possible Results of Brexit and
its Significance:
Focusing on the Korean Economy**

Sang-Hyup Shin

(Grad.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he U.K decided its leave from EU through the national referendum on June 23, 2016. The two-year negotiation for Brexit officially started with the U.K's notice on Brexit to EU on March 29, 2017. Unlike the expectation on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 the negotiation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It is rather in trouble mainly because of the different thoughts of British politicians on Brexit itself.

There are three possible types of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U.K and EU: 1) through successful Brexit negotiation, 2) through 'No deal Brexit', which means the U.K leave from EU without any decisions on the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and 3) U.K's Cancellation of Brexit. Among these, the possibility of 'No deal Brexit' is increasing.

If 'No deal Brexit' happens, in particular, finance, trade and investment sectors in Korean economy could get some negative influence from it.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possible negative influence from it.

'No deal Brexit' means that Korea will not be able to enjoy preferential status as a member country of the Korea-EU FTA. To avoid the situation, firs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sign a FTA with the U.K before 'No deal Brexit' happens. To finalize this effor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get the approval for the FTA from the Korean Parliament before October 31, 2019.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influence, in particular, the short term influence, on the financial sector. 'No deal Brexit' will increase the uncertainty in the global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on the short term basis.

▪ Key words: U.K., EU, Brexit Agreement, No-Deal Brexit, Korea-UK Trade Relation